

# 주간 통일정세

2015-39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박 대통령에 “대결언동 중단하라”…국군의날 기념사 비난(10/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을 연이어 촉구한 데 대해 “지금처럼 도발적 망동을 계속한다면 북남관계는 북남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위협함.
  - 우리민족끼리는 “우리가 유엔 무대에서 한 남조선 집권자의 대결적 망발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이 엇그제”라며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악담질을 또다시 해댄 것을 보면 고질병인 대결병 증세가 악화된 것 같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계획적인 망발”이고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씌워보려는 간특한 잔꾀”라고 주장함.
- 북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비난…“범죄적인 모의판”(10/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남한 정부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미일 상전을 등에 업고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데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한반도) 정세 긴장에 필요한 것이 바로 '북 도발설'”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우리의 자주적 권리 행사를 도발로 묘사하는 상투적 수법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함.
  - 이를 위해 남한 정부가 “(북한) 도발을 구실로 외세와의 반공화국 압박공조와 동족대결 책동을 합리화”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제도전복을 이뤄보려고 한다”고 비난함.
  - 신문은 “국제사회에서 누구에게나 부여된 합법적 권리를 도발로 매도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 짝자꿍이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 도발설을 떠들어댈수록 흉악한 정체를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건사를 똑바로 해야 한다”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도 용납지 않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대응방식”이라고 위협함.

- 북한, '10·4선언' 8주년 맞아 남한에 공동선언 이행 촉구(10/4,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4일 6면 사설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며 외세 의존과 동족 대결 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다”고 비난함.
  - 신문은 또 “남조선 당국이 '10월 도발'이니 '위반'이니 하며 우리의 자주적 권리 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외세와 반공화국 압박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어렵게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망쳐놓는 행위”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도 4일 여러 편의 글에서 앞선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를 부각하며 “지난 8월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남북 경제 관계

- 남북, 5~7일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 공동 실시(10/2, 연합뉴스)

- 남과 북은 오는 5~7일 금강산 소나무 산림병해충 방제를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2일 통일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이날 “이번 방제는 지난 7월 29일~31일 금강산 지역 병해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남북강원도협력협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방북해 잣나무잎응애 방제약품을 전달하고, 우리측 병해충방제 전문가가 피해지역에 대한 시범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 때는 잣나무잎응애 살충제, 분무기, 마스크, 장갑, 방제복 등 1억3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북측에 지원된다. 지원 물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마련됐다고 뉴스는 밝힘.
- 개성공단, 11년만에 누적 생산액 30억 달러 달성(10/4, 연합뉴스)
    -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이 공단 가동 11년만에 30억 달러(한화 3조5천억 여원)를 달성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4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누적 생산액은 29억9천616만 달러에 달했으며, 올 7월까지 총 3억2천만 달러로 매달 평균 4천600만 달러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어 지난 8월 중 30억 달러를 넘은 것이 확실시된다고 뉴스는 전함.
    - 2005년 18개였던 공단 입주기업 숫자는 현재 124곳으로서 운영 초기 평균 6천명 정도였던 북측 근로자는 이제 5만4천여명으로 9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입주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섬유’(58%)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기계금속’(19%), ‘전기전자’(11%), ‘화학’(7%) 등 순이라고 뉴스는 덧붙임.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2년 전의 가동중단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북측 근로자 모두 일을 해보자는 의지가 있었기에 생산성 향상이 가능했다”면서 “향후 공단 발전을 위해서는 임금 문제의 완전한 해소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바. 남북 사회 관계

- 남북 종교계 잇단 접촉…교류 논의(9/30, 연합뉴스)
  - 남북 종교계 인사들이 개성에 모여 남북종교인평화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최근 남북 종교계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30일 종교계에 따르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 내달 2일 개성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10월 13일 복원 8주년을 맞는 금강산 신계사에서 공동법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내달 3일 개성 시내에서 조불련과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임.
  - 한편, 남측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지난 29일 북측 5대 종단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회와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하고 남북 주요 종단 수장이 모이는 ‘남북종교인평화대회’의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했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와 세계교회협의회(WCC) 대표들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하 조그련)의 초청으로 다음 달 24일부터 7일간 평양을 방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 실행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남북 노동단체, 10월말 평양 노동자통일촉구대회 합의(9/30, 연합뉴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성 민속여관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과 남북 노동자 통일촉구대회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남북의 노동자들이 다음 달 말 평양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촉구대회’를 열기로 30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날 협의에는 남측에서 양대노총의 통일위원장 등 7명이, 북측에서 홍광효 직총 중앙위 통일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남북 3개 단체는 다음 달 13일 개성에서 2차 실무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대회 날짜와 행사 규모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내달 3일 개성서 영통사 복원 10주년 남북공동법회(10/3, 연합뉴스)
    - 개성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 법회를 11월 3일 남북한 공동으로 영통사 현지에서 봉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불교도연맹 측은 이날 회담에서 기념법회 방북 일정과 관련해 1박2일을 천태종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복원 10주년을 기념해 방북단 규모도 예년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는 전함.
    - 천태종 측은 11월 16일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할 예정인 대각국사 914주기 열반다례재 초청장을 조선불교도연맹 측에 전달해 “공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남북청소년체육대회의 연내 개최도 제안한 것에 대해 조선불교도연맹으로부터 “좋은 제안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므로 차후 논의하자”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임.

- 이번 실무회담에는 천태종 대표단으로 총무부장 월도 스님, 사회부장 설혜 스님, 복지국장 덕중 스님, 나누며하나되기 신면관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조선불교도연맹에서는 차금철 서기장 외 2명이 참석함.

■ 남북 8일 이산가족 상봉 100명 최종 명단 교환(10/4, 연합뉴스)

- 상봉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지난달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이 오는 8일 판문점에서 상봉 대상자 100명의 명단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한적은 9월 16일 북측이 의뢰한 이산가족 명단 200명의 생사확인 작업에 들어가 4일까지 확인을 마무리했으며, 그 결과는 5일 북측에 전달한다고 뉴스는 전함.
- 또 지난달에 북측에 의뢰한 남측 이산가족 250명의 북측 가족 생사 확인 결과는 5일에 받을 예정이며, 한적은 이 결과를 토대로 상봉 의사 등을 점검한 뒤 7일까지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확정한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오는 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선정된 남측 이산가족들은 상봉 하루 전날 강원도 속초 숙소에 집결해 통일부 주관 방북교육을 받고 이튿날 금강산의 만남 장소로 가게 된다고 뉴스는 덧붙임.

- 우리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특수부대편성(적의 전략적 핵심 표적 타격) 추진은 “대화과 협력, 북남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비난 및 “어리석은 자멸행위”라고 위협(9.30,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남북관계·통일문제 간섭’은 “우리 민족의 권리를 짓밟는 범죄행위, 날강도적 전횡”이라며 ‘미국의 반통일책동 不許 및 反美 자주화투쟁 전개’ 선동(9.30,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대통령과 당국자들의 ‘北, 미사일 발사·핵실험시사’에 따른 대응계획 언급에 대해 ‘反北 대결소동은 남북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몰아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9.30, 평양방송)

- ‘북한 인권법’ 관련 ‘南 집권세력의 인권소동은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미국의 침략책동에 추종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反통일행위·체제통일야망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지속 비난(10.2,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망쳐놓는

극악한 대결망동'이라며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도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위협(10.3, 중앙통신 논평)  
 - 「10·4선언」 발표(10.4) 8주년 계기 '온 겨레의 6·15 및 10·4선언을 통일강령으로 틀어쥐고 내외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민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강조(10.4, 중앙통신·노동신문)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리수용 北외무상 “평화적 위성발사 금지에 끝까지 강경대응”(10/2, 연합뉴스)
  -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적 위성발사를 금지하는 부당한 처사에는 모든 자위적 조치들로 끝까지 강경대응해 존엄을 수호하는게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리 외무상은 핵실험에 대해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세계에는 우주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국가의 자주권리로 명시한 국제법이 있다”며 “위성을 발사하는 나라가 10개가 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불법적인 결의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함.
  - 또 “세계적으로 이미 9개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2천 번 넘게 단행했지만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은 불과 3차례도 하기 전 핵실험을 금지하는 결의를 만들어냈다”고 비난을 이어감.

### 나. 주요 매체 논평

- “미국의 ‘북한 10월 도발설’,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10/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10월 도발설’ 기사에서 “지난 8월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한 미국이 실제로는 북남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지난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한 것도 “위성 발사를

기성사실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의 도발을 인상짓기 위한 변술"이라고 강조함.

#### 다. 회담 관련

- 아사히 “北미사일 발사장 향하는 화물열차 움직임 확인”(10/2, 아사히신문)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향하는 화물열차의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2일 보도함.
  - 아사히는 정보 관계 소식통을 인용, 한미일 3개국이 지난 1일 시점까지 동창리로 가는 화물 열차의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열차는 평양시 산음동의 무기공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며, 적재한 화물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함.
  - 또 신문은 화물열차가 미사일(장거리로켓) 기체를 운반했다고 치더라도 조립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북한이 중시하는 조선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일)까지 발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함.

####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 마. 대중국

- 북한 김정은,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달랑 두 문장뿐(9/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와 함께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3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우리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6돌에 즈음해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그리고 당신들을 통하여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으며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과 귀국 인민의 행복을 축원한다”고 덧붙임.



- 주북 中대사, 기념일 맞아 인민지원군 열사능 참배(10/1, 연합뉴스)
  - 리진권(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열사기념일’인 지난달 30일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아 ‘항미원조’(抗美援朝) 정신을 강조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리 대사는 전체 대사관 직원들과 기념시설 보수인력, 북한에 체류하는 화교 및 유학생 대표 등 120명과 함께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았으며 제문을 통해 “선열들은 60여년전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이란 위대한 기치를 내걸고 위풍당당하게 압록강을 건너 조선(북한) 군민과 함께 싸워 제국주의 침략자를 물리쳤다”면서 “국제주의와 항미원조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북한 당 창건 기념일에 류윈산 상무위원 파견(10/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초청에 따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서기처 서기인 류윈산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당창건 70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며 조선을 공식 친선방문한다”고 보도함.

##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반기문, 리수용 北외무상 접견…남북 대화·교류증진 기대(10/2,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접견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반 총장은 유엔의 향후 15년간 개발 청사진인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가 최근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는 데 북한이 지지를 보낸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으며, 지난달 8월 25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 접촉이 타결되고, 이에 따라 남북한이 오는 20~26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한 데 대해서도 환영했다고 유엔 사무총장실이 전했다고 뉴스는 보도함.
-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남북 간 협력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유엔이 앞으로도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함.

## 자. 기타 국가

- 영국 외교부, 대북제재 명단 발표...개인 33명·기업 36개(10/1,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일 “영국 외교부가 지난달 29일 영국의 금융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며 “여기에 북한의 개인 33명과 기관·기업 36곳이 포함됐다”고 보도함.
  -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연루됐으며 개인에는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이제선 원자력공업상,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이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 조선용약산무역총회사 총사장 등 유엔 대북제재 대상 12명이 포함됨.
  - 또 현철해 군 차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군 차수, 전병호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2014년 7월 사망), 김동원 전 39호실장 등 유럽연합 제재대상 21명도 이 명단에 올랐음.
  - 모두 36개의 제재대상 기관·기업 가운데 20곳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16곳은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해성무역, 광성무역, 조선국영보험회사 등 유럽연합 제재대상이었다고 방송은 전함.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영국잡지(The week)에 실린 ‘북핵’의 긍정적 기사를 거론 ‘핵보유의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자위적 전쟁억제력은 끊임없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10.2,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3일 독일 국경절을 즈음하며 同國 대통령(요아힘 가우크)에게 축전(10.3, 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 공산당 대표단(단장: 류운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북한 ‘黨 창건(10.10)’

- 70주년 경축행사 참석차 북한 공식친선방문(北 노동당 초청에 따른) 예정(10.4,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4일 레소토 국왕(레치에 3세)에게 ‘레소토 독립’ 49주년 축전(10.4, 중앙통신·중앙방송)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제약공장 시찰…“모범적 공장 따라배워라”(10/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설 확장 공사를 마친 정성제약종합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함.
  - 이날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 비서, 서홍찬 인민군 상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수행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장을 돌아본 뒤 “의약품의 가짓수가 많고 효능이 높다”, “포장 용기들의 위생성, 문화성, 실용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됐다”, “약품설명서도 사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백두산발전소 완공…김정은 “청년들 눈물겨웠다”(10/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을 빛내이며 백두산영웅 청년발전소가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로 일떠섰다”며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솟아오른 발전소 준공식이 3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함.
  - 준공식에는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남·최룡해·최태복·김양건·곽범기·오수용·김평해 당비서와 리일환 당 부장, 리상원 양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장 등이 참석함.
  - 김 제1위원장은 준공식 연설에서 “당에서 발전소 건설 과정을 보면서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백두산지구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보다 청년들이 건설을 통해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굳게 단결된 것”이라고 평가함.
  - 그는 이어 “조직력과 규율성이 강하고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 불태우는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맹장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된 것은 몇십, 몇백만 kw 전기를 얻는 것에 비할 수 없는 커다란 승리”라고 치하함.

- 그는 "뜻깊은 10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린 청년중시사상 만세의 환호소리는 청년들을 변질와해시켜 우리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는 무서운 뇌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당중앙은 다음해 청년절까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건설을 무조건 끝낼 것을 명령한다"면서 "청년들이 앞장서서 해산-삼지연 철길 건설을 다그치고 양강도 감자농사를 비롯한 경제사업 전반과 인민생활 향상에 본보기를 창조해야 한다"고 추가적 과제도 부여함.
- 김 제1위원장은 연설이 끝나고 사업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준공식에 이어 발전소 인근에서는 김 제1위원장과 노동당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청년대합창 축하 공연이 열림.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다. 공식 행사

- 북한, 10일부터 당창건 70주년 기념공연...악단 총출동(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10일부터 일주일간 평양에서 모란봉악단을 비롯한 각종 예술단체의 공연을 진행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기념일 당일인 10일 오후 10시에는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당창건 일흔돌 경축 대공연'이 평양 주체사상탑 앞 대동강에서 진행되며 공연은 11~16일에도 오후 9시부터 열리며,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이 12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오후 9시에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거행된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공연관람표는 국가예술공연운영국의 관리에 따라 각 지구보급소에서 판매되며, 평양국제비행장과 평양고려호텔을 비롯한 일부 시설에서 외국인과 해외 동포들에게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 특이사항 없음.

- ‘黨 창건(10.10) 70주년 즈음 지식인들(과학연구와 교육사업 성과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 이바지)에게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9월 3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9.30, 중앙통신·중앙방송)
- 개천절(10.3) 기념행사, 10월 3일 평양 강동군 단군릉 앞에서 진행(10.3, 중앙통신·중앙방송)
- ‘黨 창건’(10.10) 70주년 경축 전국 초급직맹예술소품경연,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진행(10.3,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성시에 김일성·김정일父子 동상 건립 기여’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등 평안남도 여러 단위-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0.4, 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조치

- 소비재 부각된 평양 상품전람회…상업주의 ‘생생’(10/2, 호주 데일리메일)
  - 지난달 21~24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최대 무역 박람회인 ‘제11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현장의 상세한 모습이 데일리메일 호주판에서 2일 공개되었음.
  -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은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 판의 증언과 그가 현지에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통해 올해 상품전람회의 풍경을 소개하면서 독일과 싱가포르 등 13개국 300개 회사들이 참여한 이번 전람회를 통해 북한에도 상업주의가 “생생하다(well and alive)”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함.
  - 또 “올해 평양 상품전람회에는 소비재와 핸드백, 장신구들이 많이 선보이면서 지난해와 달리 아마 방문객의 절반은 여성이었다”고 덧붙임.

## 다. 경제 상황

- “북한 1인당 식량배급, 지난 3년 평균보다 21% 줄어”(10/1, 미국의소리)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 1명당 하루 25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3년간 북한의 8~9월 평균 배급량인 317g보다 21% 감소한 규모라고 밝힘.
  - 코슬렛 담당관은 “북한의 식량배급이 줄어든 것은 가뭄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가뭄에 이은 홍수로 식량 사정이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세계식량계획(WFP)도 지난달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74만2천여명에게 2천105t의 식량을 제공했는데, 이는 지난 8월 73만여명에게 3천785t을 지원한 것에 비해 44% 감소한 것이라고 방송은 밝힘.

##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 남포-중국 룡커우 정기 화물항로 개통(9/3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평안남도 남포항과 중국 산둥(山東)성 룡커우(龍口)항을 연결하는 해상 화물 정기노선이 지난 16일 정식 개통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이날 룡커우항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북한 항구총회사 오승관 부사장과 룡커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 노선에는 총 7척의 선박이 투입되며, 10일 주기로 두 곳을 오가게 됨.
  - 북한에서는 석탄을 벌크 상태로 중국으로 실어나르고 중국에서는 주로 식료품 등 잡화를 컨테이너를 통해 북한으로 운반할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함.
- 북한 관리들, 말레이시아서 자본주의 경제개발 연수(10/3, 조선익스체인지)
  - 북한 관리들이 말레이시아에서 경제개발 방법을 연수받았다고 싱가포르의 민간단체인 조선익스체인지가 3일 밝힘.
  - 북한의 젊은 경영 관리인과 관료들에게 자본주의 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이 단체는 최근 북한 관리 10여 명을 대상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의

경제개발 정책을 교육했으며, 북한 관리들이 창업지원기관인 “글로벌 혁신과 창조센터”의 구성과 운영자금 마련, 이윤창출 방법, 첨단기술 분야의 개발을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개발위원회’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전함.

- 앞서 이 단체는 지난 8월 북한 관리들에게 소규모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소액금융에 대한 워크숍도 진행함.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의과대, 중국 연변서 의료연수(10/3, 자유아시아방송)

- 김일성종합대학의 평양의과대학 의료진이 중국 지린성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의료연수를 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방송은 연변대학 부속병원 홈페이지를 인용해 리학철 김일성대 평양의대 부속병원 부원장 등 8명이 7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소아과, 종양부, 신경내과, 심혈관 내과 등 분야별 임상치료를 참관했다고 전함.
- 북한 의료진은 또 8월 12일 중국 의료진과 함께 ‘제1회 북중 임상의학 학술토론회’를 열기도 했으며, 토론회에는 김철호 연변대학 의학부장 겸 부속병원장도 참가했다고 뉴스는 전함.

- 전국금속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조선과학기술총연맹 주최), 9월 30일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진행 및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등 과학자-기술자들 참가(9.30, 중앙통신·중앙방송)
-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분쇄기 등 여러 경공업공장들에 식료설비들 개발 지원(9.30,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형직사범대학 생명과학부 연구집단의 ‘메기 베타락틴유전자프로모터(새로운 메기 유전자 재조합체, 메기 증체율 최고 30배 향상)’, “NCBI 자료기지 등록” 선전(9.30, 중앙통신)
- 北, 평안북도 ‘신의주청년역’ 개건(10.2, 중앙통신)
- 북, 백두산영웅청년2호발전소 전력생산 개시(10.3, 중앙방송)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中당국에 ‘스파이혐의’ 구속 일본인 중 1명 탈북자(10/2, 아사히신문)
  - 스파이 혐의로 지난 5월 중국 당국에 구속된 일본인 2명 중 1명은 탈북자라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함.
  -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중국 당국에 구속된 가나가와(神奈川)현 거주 50대 남성 A씨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로 중국 측에 자신이 일본 정부기관과 관계돼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짐.
  - 아버지는 재일조선인, 어머니는 일본인인 A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1960년대 재일조선인 귀환사업이 진행됐을 때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1990년대 후반 탈북했으며 이후 2001년 일본으로 돌아온 뒤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아사히는 전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2016 아시아 실내조정 선수권, 평양에서 개최(9/30, 연합뉴스)
  - 대한조정협회(이하 협회)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조정연맹(ARF) 정기 총회에서 2016 아시아 실내조정선수권대회가 북한 평양에서 열리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에서 국제 조정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회는 내년 5월께 열릴 전망이다.
  - 협회는 북한측 임원이 ARF 총회에 참석해 대회의 평양 개최를 요청했고, 각국 대표들은 한반도 평화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만장일치로 안전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함.



- 북한 영아사망률 세계 74위...OECD 평균 5배·남한의 6배(10/2, 연합뉴스)
  -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배, 남한의 6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의료기관은 필수약품이나 진단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모자보건 사업을 중심으로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북한의 보건 의료 현황과 남북한 보건 의료 협력방안'(김주경, 이승현) 보고서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 북'(지난 6월 말 업데이트)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영아 사망률(출생아 1천명당 1세 미만 사망자 수)은 23.6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4.51명보다 5.3배, 남한 3.86명보다 6.1배 각각 높았음.
  -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전 세계 223개국 중 74위로 높았다. 우간다(49.21명), 라오스(52.97명), 캄보디아(50.04명)보다는 낮지만 몽골(22.44명)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어린이들까지 강제 노동...국제사회 중단 촉구해야”(10/2, 연합뉴스)
  -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2일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에 관한 보고서에서 “어린이와 성인, 수용소 수감자, 해외 파견 노동자 등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보고서는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이 자국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이는 실제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서 일어나는 강제 노동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함.
  - 보고서는 이러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개선하려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각지 대학들, 현실적 의의가 큰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고 선전(10.2, 중앙통신)
- 김혜성·리미경 선수들의 제22차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9.26~10.3, 태국) 여자 복식 우승 소식 등(최일·리미경 선수, 혼성복식 동메달) 보도(10.4,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특이사항 없음.

#### 나. 미·북 관계

- 미 국방부, 사이버안보 위협 사례로 맨 먼저 북한 거론(9/30, 연합뉴스)
  -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지난해의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사이버 위협’ 항목의 첫 사례로 지목했음.
  - 이날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사이버안보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주요 위협 행위자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다음으로 북한을 꼽았고, 사이버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로저스 NSA 국장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능력이 미국 민간기업을 위협한 북한의 소니픽처스에 대한 공격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음.
  - 워크 부장관 등 청문회장에 출석한 미군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사이버 부문에서 적대국 또는 테러단체의 공격 의지를 꺾을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주문했음.
  - 클래퍼 국장은 중국발 사이버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경제 제재를 거론하기도 했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공격 사례가 언급된 것과 달리 북한을 상대로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이나 그에 대한 의회 차원의 주문은 나오지 않았음.

#### 다. 중·북 관계

- 북한, 남포-중국 룡커우 정기 화물항로 개통(9/30, 연합뉴스)
  - 북한 평안남도 남포항과 중국 산둥(山東)성 룡커우(龍口)항을 연결하는 해상 화물 정기노선이 지난 16일 정식 개통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음.

- 북한에서는 석탄을 벌크 상태로 중국으로 실어나르고 중국에서는 주로 식료품 등 잡화를 컨테이너를 통해 북한으로 운반할 예정이다.
  - 중국 신화통신은 이번 노선 개통이 중국 정부의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 남포항은 대동강 하류에 있어 중국산 식료품 등을 평양 등지로 수송하기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중국 내 석탄 수요의 감소와 북한산 석탄의 낮은 품질 문제는 남포-룽커우 노선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주북 中대사, 기념일 맞아 인민지원군 열사능 참배(10/1, 연합뉴스)**
    -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리진권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전체 대사관 직원들과 기념시설 보수인력, 북한에 체류하는 화교 및 유학생 대표 등 120명과 함께 열사기념일인 지난달 30일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아 ‘항미원조(抗美援朝)’ 정신을 강조했다.
    - 리 대사는 제문을 통해 “선열들은 60여년전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이란 위대한 가치를 내걸고 위풍당당하게 압록강을 건너 조선(북한) 군민과 함께 싸워 제국주의 침략자를 물리쳤다.”면서 “국제주의와 항미원조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은 6·25전쟁 당시 인민지원군으로 참전한 중공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안장된 곳이며 마오쩌둥(毛澤東)의 아들 마오안잉(毛岸英)도 이곳에 묻혀 있음.
    - 리 대사가 이곳을 참배한 것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열사’를 참배한다는 의미와 함께 6.25 전쟁 당시 중국이 피흘려 북한을 지원했다는 ‘혈맹’이란 점을 강조한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됨.
  - **북중접경 단둥서 100년만에 무관세 ‘호시무역’ 재개(10/1, 연합뉴스)**
    - 1일 중국 단둥신문망(丹東新聞網)에 따르면 단둥시는 귀민(國門)항에 북중 접경주민 간 무관세 교역을 허용하는 호시무역구 조성을 마치고 오는 15일 개장한다고 보도했음.
    - 국경무역의 일종인 호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단둥의 지리적 이점 덕분에 구한말까지 실시됐으나 일제 강점 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부활했음.
    - 옛 공업기지 노후화로 최근 수년간 경제침체에 시달린 랴오닝성은 경제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호시무역구 재개를 채택하고 북·중 교역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단둥에 대해 지난 7월 무역구 운영을 승인했음.
    - 단둥 호시무역구는 북중 국경지역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양국 주민에게 상품교환 활동을 허용하고 하루 인민폐 8천 위안(약 148만원) 이하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과징금을 면제함.

- 중국, 파격적인 상무위원 파견…북한과 ‘빅딜’ 있었나(10/4, 연합뉴스)
  - 북중 양측의 고위급 교류는 2013년 초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대표적 친중파로 꼽혀온 장성택에 대한 처형으로 사실상 끊긴 상황이었으며,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 방북카드’는 여러 면에서 파격적임.
  - 이에 따라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음.
  - 하나는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놓고 양측이 타협했을 수 있다는 관측으로, 북한이 중국의 압박에 영향을 받아 로켓 발사를 접은 것이라면 결코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임.
  -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북중 관계의 틈이 더욱 벌어지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류 상무위원을 ‘소방수’로 긴급 투입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됨.

####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한미일 외교장관 뉴욕회담…북한 도발에 강력 경고(9/30,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은 29일 오전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음.

- 회담에서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등에 대한 우려를 같이하고, 북한의 도발이 실제로 이뤄지면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음.
- 윤 장관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포함해 국제 사회가 공조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자는 이야기와, 그래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때는 이전보다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그는 “안보리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이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 “언제, 어떤 형태로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음.

■ 블링큰 美 국무부 장관 내주 방한…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9/30,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방한해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한-미 동맹 강화와 양자-다자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밝혔음.
- 블링큰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지평을 비롯해 보건, 환경, 우주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7일에는 다음 달 중순 박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임.
- 그는 한국 방문에 앞서 5일 일본을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다양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계획이며, 이어 8일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임.

## 나. 한·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다. 한·일 관계

■ 아베 총리, 유엔서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희망’ 또 피력(9/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는 뜻을 또 피력했음.
- 그는 이날 연설에서 캄보디아, 남수단 등에서 일본이 참여한 평화유지활동(PKO)을

나열했으며 “일본 자신이 앞으로 PKO에 더 폭넓게 공헌할 수 있도록 최근 법제도를 갖추었다.”고 최근 안보 관련법을 제·개정된 것을 함께 홍보했음.

- 그는 “일본은 유엔이 21세기에 어울리도록 안보리를 개혁하고 상임이사국이 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한층 공헌하는 책임을 이행할 각오”라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유엔을 개혁하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을 강조했다.
- 일본은 다음 달 예정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지역 그룹 가운데 단독 출마해 11번째 당선에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며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 국가와 함께 상임이사국을 확대해야 각 지역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아베 총리는 2013년과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여성의 인권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도 전시 성폭력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한일, 뉴욕서 외교장관회담…일본군 위안부 문제 ‘점점’ 주목(9/30,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제70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 및 개최 의사도 서로 타진했을 것으로 관측됨.
-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냉각된 상황에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 사실상 장애물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음.
- 회담에서는 또 최근 집단자위권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안보법제가 통과된 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무단진출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음.
- 한국 측은 일본이 개정 법제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한국의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日, 한반도유사시 일본인 대피방안 협의 요구…한국은 거부(10/1, 연합뉴스)

-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내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해왔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음.
-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 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한국 측에 실무 차원에서 요구를 해왔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으로 경색된 한일관계, 사안의 민감성 등을 거론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탈출하는 일본인을 실은 미국 함선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만, 한일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한국내 일본인을 미국 함선까지 어떻게 이동시킬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상태임.
  -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정비(11개 안보 관련 법 제·개정)를 계기로 미일 사이에 물자·용역을 서로 융통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때 군사 행동을 하는 미군에게 후방지원 차원에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새 법률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 **방위장비청 오늘 발족…무기개발에 수출창구 역할까지(10/1, 연합뉴스)**
    - 일본에서 무기 개발 및 구입, 수출 창구 역할 등을 맡을 방위장비청이 1일 직원 약 1천 800명, 예산 2조엔(약 20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 집단 자위권법 통과로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확대할 전망이다 가운데, 방위장비청은 무기의 연구·개발·도입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기 수출 및 외국과의 공동개발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특히 외국 정부 및 민간 등과의 대외협상에서 창구 역할 담당,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과 수출 지원, 외국 방위산업 및 국방 기술과 관련한 정보 수집, 외국 연구기관과의 제휴 등 업무도 방위장비청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발족에는 작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무기수출의 족쇄를 풀 아베 신조 내각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더여권 주요인사 잇단 방한…한일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주목(10/2, 연합뉴스)**
    - 집권 자민당 출신의 11선 의원인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이 오는 1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 등과 회동한다고 NHK가 2일 보도했으며, 오시마 의장은 한국 의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또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아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가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하며, 아마구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예방을 타진 중인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음.
    - 이르면 10월 말~11월 초에 한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아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며, 이 때문에 일본 여권의 요인인 오시마 의장과 아마구치 대표의 방한이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으로 연결될지 주목됨.

- 국방부, “적절한 시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 추진”(10/2, 연합뉴스)
  - 하리다 겐지(原田憲治) 일본 방위정무관은 이날 경북 문경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식 참석차 백승주 국방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니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방한 희망 의사를 백 차관에게 전달했음.
  - 일본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에 적극적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양국 정세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음.
  - 정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올해 안에 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양측이 앞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음.
  - 백 차관은 지난달 30일에는 마이밍(馬宜明) 중국 총참모장 조리와 면담해 ‘한반도 비핵화는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국방부 고위급의 긴밀한 소통으로 상호 신뢰를 강화하기로 했음.
  
- 윤병세 장관, “한일 정상회담, 위안부 진전 시 더 좋은 여건 조성”(10/4,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진전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전제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 정상회담이 되려면 그런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볼 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일본 측에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됨.
  - 윤 장관은 “그동안 협상을 보면 가다가 서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단계는 약간 서 있는 시점”이라면서 “병목현상이 언제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협의가 있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음.
  - 이어 “이 시점에서는 일본 측에 시급성을 감안해 빨리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음.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미·중 관계

- 미 CIA, 중국주재 요원들 철수시켜 …해킹으로 정체노출 우려(9/30, 연합뉴스)
  - 중국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국 공무원 개인정보 대량 해킹 사건으로 중국 주재 요원들의 정체 노출을 우려한 미 중앙정보국(CIA)이 요원들을 중국에서 철수시켰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음.
  - 이와 관련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은 29일(현지시간) OPM 해킹과 같은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미국도 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나타냈음.
  - 그는 특히 “유리집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옛 속담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도 행하는 행위와 관련해 상대국을 제재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음을 시사했다고 WP는 전했다.
- 미국·일본·인도 첫 3국 외교장관 회담…중국 견제(9/30, 연합뉴스)
  -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은 2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이들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해·비행의 자유, 법의 지배 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중국의 해양 진출 구상에 우회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임.
  - 이들은 또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음.
  - 이번 회담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온 미국과 일본이 인도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됨.
- 미본토 사정권 미사일 탑재 中 핵잠수함 첫 순항(10/1, 연합뉴스)
  - 중국 인민해방군 남해함대 류밍리(劉明利) 정치위원(소장)은 최근 하이난 쑤아(三亚)에서 열린 공로 축하 행사에서 아룽(亞龍)만 잠수함기지의 41 잠수함 승무원 부대에 1등 공훈 표창을 수여하고 치하했다고 명보(明報)가 중국 해방군보(解放軍報)를 인용해 1일 보도했음.
  - 명보는 094형 핵잠수함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구성된 41 승무원 부대가 1등 공훈 표창을

받은 것이 094형 핵잠수함이 '취량(巨浪·JL)-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채 전투태세 순찰항해를 한 것과 관련 있다고 전했으며, 이는 이번 표창이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최근 094형 핵잠수함이 올해 말 첫 전투태세 순찰 항해를 개시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증명했다는 설명임.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달 24일 성명에서 중국 해군이 올해 안에 취량-2를 탑재한 진급 핵잠수함을 첫 초계활동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음.
- 취량-2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8천km로 일본 인근 해역에서는 미국 알래스카를, 하와이 동쪽에서는 미국 50개주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094형 핵잠수함은 취량-2 미사일 12기를 탑재할 수 있음.

## 바. 미·일 관계

- 미일, 주일미군기지 환경관리 日권한 강화 합의(9/30,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주일 미군기지 내 현지조사에 관한 '환경보완협정'에 서명했다고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했으며, 협정은 즉시 발효됐음.
  - 이번 협정은 주일미군이 시설이나 토지를 일본에 반환할 경우, 약 7개월 전부터 일본 측이 조사를 위한 현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임.
  - 또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일본 측은 오염이 의심되는 토양과 수질 샘플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되도록 신속히 응답해야 함.
- 미국 원자력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일본 배치(9/30, 연합뉴스)
  - 미국 해군의 원자력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 다음 달 1일 일본 요코스카(横須賀) 기지에 배치된다고 일본 외무성이 미국 해군의 발표를 인용해 30일 밝혔음.
  - 로널드 레이건 호는 앞서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돼 있던 조지 워싱턴 호가 정비를 위해 올해 5월 일본을 떠남에 따라 배치되는 후속 항공모함임.
  - 로널드 레이건 호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미군이 피해 지역 일본인을 지원하기 위해 벌인 '도모다치(친구라는 뜻의 일본어) 작전'에 투입된 기종임.

## 사. 미·러 관계

- 마-러 시리아해법 충돌 속 미 러시아담당 국방차관보 사임(10/1, 연합뉴스)
  -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놓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방부의 러시아 담당 최고위직인 에블린 팔카스 차관보가 다음 달 사퇴한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팔카스 차관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유라시아 전반에 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휘해온 대(對)러시아 강경파로, 미군 유럽사령부와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자문관으로 활동하는 등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힘.
  - 폴리티코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이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과의 교전을 위해 새로운 살상무기를 제공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과 시리아 내에서 러시아의 군사전개 등에 대한 대응을 놓고 갈라진 민감한 시기에 그의 사퇴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 미, “시리아 러 공습, IS타격 안한 듯” vs 러, “IS기지 공습”(10/1,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IS(이슬람국가)와 싸우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습을 개시한 것과 관련, “공습이 가해진 지역이 아마도 IS세력들이 있는 장소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음.
  - 카터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이날 행동이 시리아 내전사태에 대한 접근방식이 지닌 문제점 중의 하나라면서 시리아 내 러시아의 행동은 “실패할 운명에 처할 오류”라고 비판했음.
  - 이어 케리 장관은 “러시아가 IS와 알카에다 분파들의 작전을 벌이지 않는 곳을 타격한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그런 종류의 타격은 러시아가 IS와 싸우려는 것인지,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등 진짜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앞서, 러시아는 이날 연방의회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파병 요청을 승인하자 시리아 서부 라카티아 공군기지에 주둔하던 전투기들을 발진시켜 서부 도시 홈스의 반군 기지를 공습했다고 CNN 등이 전했다.
  
- 마-러, 시리아서 군사회담 개최키로(10/1, 연합뉴스)
  -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곧 시리아에서 군사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밝혔음.

-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만난 뒤 “충돌을 피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긴급 군사 회담을 여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 미국은 러시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한 지원이나 공습 대상에 대한 우려에도, 정치적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으며 양국의 견해차를 해결하기 위해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케리 장관은 덧붙였다.
- 오바마 대통령, “푸틴의 시리아 공습은 재앙의 레시피”(10/3, 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슬람 국가(IS)’와 같은 테러단체와 아사드 장권의 퇴진을 바라는 온건 수니파 반군세력을 구분하지 못한다.”면서 러시아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은 “재앙으로 가는 레시피(recipe) 특정한 결과로 이끄는 어떤 것”라고 맹비난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정권이 시리아에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라며 “고객인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있고 무기와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단순히 아사드 정권의 행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러시아의 공습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리아 공습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사태를 막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계속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음.
  - 크렘린, “푸틴-오바마 뉴욕 회담 상호이해 성과 못내”(10/4, 연합뉴스)
    -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3일(현지시간) 자국 TV 방송 ‘로시야-24’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8일 뉴욕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이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 페스코프는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의 회담은 건설적이었지만 상호 이해를 강화할 정도의 의견 교환은 없었다.”면서 “미국 파트너들은 유연성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논거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 그는 회담에서 두 정상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미국 측은 푸틴 대통령의 논리를 반박할 논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페스코프 비서는 또 서로 간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은 민감한 문제들을 다분히 직설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실무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서로 ‘너’라고 호칭할 정도로 친근한 사이라고 설명했다.

## 아. 중·일 관계

- 中, 일본인 2명 간첩혐의 구속…중일관계 또 하나 악재(9/30, 연합뉴스)
  - 아사히 보도에 의하면, 중국 랴오닝성과 저장성에서 여행 중이던 일본 국적의 민간인 남성 2명이 지난 5월 스파이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중국 당국에 구속됐으며, 중국 외교부도 이날 일본인 구금 사실을 확인했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국민 보호의 관점에서 재외공관에서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뒤 스파이를 중국에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해외 반(反) 중국 세력의 유입을 경계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으며, 작년 11월에는 스파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반(反) 간첩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는 국가안전법을 제정했음.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일본인 2명이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으며, 이들을 수개월 구금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만 답변했음.
  
- 中당국에 ‘스파이혐의’ 구속 일본인 중 1명 탈북자(10/2, 연합뉴스)
  - 스파이 혐의로 지난 5월 중국 당국에 구속된 일본인 2명 중 1명은 탈북자라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음.
  - 아버지는 재일조선인, 어머니는 일본인인 A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1960년대 재일조선인 귀환사업이 진행됐을 때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1990년대 후반 탈북했으며, 이후 2001년 일본으로 돌아온 뒤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 단둥시는 북중관계의 동향 등을 파악하려는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곧잘 찾는 곳이어서 중국 공안 당국은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해왔음.
  
- 중국, 국경절 맞아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10/2, 연합뉴스)
  - 중국이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절(10월1일)을 맞아 남중국해 일대 도서지역에서 국기게양식을 하며 영유권 강화 의지를 재천명했음.
  - 2일 관영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에 따르면, 하이난(海南)성 썬사(三沙)시는 전날 새벽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에 속한 9개 섬과 암초에서 국기게양식을 열었음.
  - 썬사시는 중국정부가 2012년 7월 파라셀 제도, 스프래틀리 제도 등을 한 데 묶어 세운

행정구역으로, 지난해 국경절 연휴 때에도 도서지역에서 국기계양식을 개최한 바 있음.  
- 중국은 이들 섬과 암초가 속한 해역을 놓고 주변 국가들과 치열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음.

■ 日, “中 위안부자료 세계유산등록추진 극도로 유감”(10/2,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중국이 군 위안부와 난징(南京) 대학살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데 대해 “극도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중국이 유네스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일·중 간에 과거 한때 있었던 부정적 유산을 불필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스가 장관은 또 “유네스코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일본)의 입장과 유네스코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신중하게 심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日정부, 중국서 구속된 일본인에 정보수집 의뢰 의혹(10/3,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올해 5월 중국에서 구속된 일본인 남성 2명에게 일본公安조사청이 중국이나 북한의 정세에 관한 정보를 중국에서 수집해달라고 의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3일 보도했음.
- 이들은 그간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며公安조사청이 중국의 군사 동향, 중국과 북한의 접경 근처에서 파악되는 북한 움직임, 일본인 납치 피해자나 탈북자에 관한 정보 등의 수집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 또 구속된 이들이 연루된 사건이 일상적 정보수집 활동의 연장이며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지만,公安조사청은 이런 의혹에 관해 ‘대답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냈음.
-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스파이 활동을 단속하는 모호한 법규를 멋대로 운용할 것이 우려되며 구속된 일본인을 아베 신조 정권을 흔드는 외교 카드로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3일 실어 일본인 구속이 중일 간의 또 다른 갈등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일본서 中연수생 총기 사살한 경찰관 무죄(10/3, 연합뉴스)

- 일본 법원이 검문에 저항하는 중국 연수생에게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경찰관에 최종 무죄를 선고하자 중국 여론이 들끓고 있음.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최근 중국 연수생 뤼칭(羅成·당시 38세)을 사살한 일본 도치기현 가누마(鹿沼)경찰서 소속의 히라타 마나부(平田學·34) 순경에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5천만엔의 배상금 청구도 기각했음.
  - 히라타 순경은 지난 2006년 6월23일 시내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하던 도중 뤼칭이 도주하며 저항하려 하자 총기를 발사했고, 복부에 총을 맞은 뤼칭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음.
  - 당시 정당방위로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하려던 일본 경찰과 지방 정부를 상대로 이듬해 8월 뤼칭의 부인과 형이 직접 일본에 가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뒤 9년간 재판 결과가 엇치락 뒤치락 바뀌며 이어져왔으며, 결국 도쿄고법은 공무원의 폭행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히라타 순경이 뤼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배상 청구를 기각했음.
- 중국 해경선, 국경절 기간에도 '센카쿠' 순찰(10/4, 연합뉴스)
    - 중국이 국경절 연휴 기간에도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 대한 순찰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음.
    - 순찰에 나선 해경선은 해경 '2401', '2101', '2112' 호 등 3척이라고 중국 해양국은 밝혔으며, 일본 해상보안청도 중국 해경선 3척이 3일 오후 2시30분께 일본 영해에 침입, 약 2시간 정도 머물다 돌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다.
    - 중국은 지난달에만 7일, 10일, 19일 등 3차례에 걸쳐 해경선을 '댜오위다오' 해역에 파견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30차례 가까이 순찰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핵·인권 거론에 발끈…북 “이산상봉 판 깨질 것” 업포(9/30, 경향신문)
  -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반발하며 20일부터 열릴 예정인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음.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9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연설 기초연설이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쳐놓는 극악한 대결망동”이라고 주장했음.
  - 조평통은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북핵은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느니, 북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느니 하고 악담질을 하였다”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밝혔음.
  - 조평통은 또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 언급에 대해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 보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했음.
  -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소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물론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처럼 대결악담을 늘어놓는다면 판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 내외여론의 일치한 목소리”라고 주장했음.
  -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무산’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 조평통이 담화에서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화해의 아량을 뿌리치고 한사코 대결하자고 달려드는 상대에게까지 계속 관용을 베풀 생각은 없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경고’의 성격이 짙어 보임.
  - 또한 조평통이 박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남조선 집권자’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함.
  -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핵, 인권, 통일 등 민감한 주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정도의 반응은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음.



- 카타르 “북한 등 해외 노동자 임금 지급방식 변경”(9/30, 노컷뉴스)
  - 카타르 당국이 자국에 파견된 북한 등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 지급 방식을 올해 말부터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 중동지역 일간지인 더 페닌슐라(The Peninsula)는 최근 “카타르 당국이 오는 11월 3일부터 북한 노동자를 포함한 카타르 내 모든 노동자의 월급 지급방식이 변경될 것”이라고 보도했음.
  - 그러면서 “인터넷 온라인 방식을 통해 의무적으로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임금보호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 카타르에서 일하고 있는 카타르의 중견 건설회사인 CDC의 북한 노동자 감독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 노동자 3천여명이 주로 카타르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는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을 비롯해 쿠웨이트와 오만 등 중동 걸프지역에 파견된 전체 북한 노동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 또 “북한 노동자들은 이 중동 걸프지역에 약 12년에서 13년 전부터 파견되기 시작했고, 카타르에서 60층짜리 호텔을 짓는 등 성공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 카타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보통 카타르 돈으로 매달 2천500 카타르 리알에서 8천500 카타르 리알(미화로 690달러~ 2천300 달러) 정도를 받고 있음.
  - 중견 노동자는 매달 1만6천 카타르 리알(미화 4천400 달러 정도)까지 받는다고 북한 감독관은 말했다.
  - 북한 감독관은 “카타르에 있는 건설회사는 이미 예전부터 북한 노동자가 갖고 있는 개인 은행계좌로 월급을 입금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 내고 싶은 만큼만 북한 정부에 낸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최근 몇달동안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자 언론을 이용해 자신들의 인권유린 상황을 덮어 보려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 북, ‘애육원’ 건립비용도 주민에 떠 넘겨(9/3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당 창건 기념 70돌까지 각 도(道)마다 평양 수준의 애육원을 한 개씩 세우라는 지시를 내려 각 지방 당과 행정일꾼들, 주민들 모두가 몫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량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원수님 방침을 받은 각 도에서는 이에 필요한 건설비용을 모든 기업소와 기관에 내리매겼다”면서 “건설비용 과제를 부여 받은 각 단위 기관과 기업소에서는 또 다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속 성원들에게 내리매졌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그러면서 “내가 속한 기업소에서는 1인당 현화(미화)로 10달러를 바치라고 했다”면서 “10달러면 대충 계산해도 쌀 열 킬로(10Kg)를 넘게 살 수 있는 매우 부담스러운 액수”라고 말했다.
  - “이런 사정으로 인해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원수님 지시사항을 완수해 낼 도(道)는 단 한 군데도 없을 것 같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 소식통은 또 “원수님 지시사항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실적이 미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각 도당과 행정일꾼 책임자들은 다른 도(道)의 해당사업(애육원 꾸리기) 진척도를 열심히 살펴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이미 각 지방에도 애육원이 있긴 하지만 평양의 애육원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소식통은 이어서 “문제는 중앙에서 예산 한 푼 안 내려 주고 무조건 주민들에 건설경비를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한 마디로 북한주민들은 월급을 받기는커녕 월급을 바치면서 직장에 다니는 꼴”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평안북도 소식통은 “우리 도(道)의 경우는 “기업소 뿐만 아니라 여맹(여성동맹)에서도 부녀자들에게 5달러씩 내리매졌다”고 덧붙였다.
  - 그동안 북한은 주로 평양의 잘 꾸려진 애육원들을 남한과 외국 언론들에 소개해 왔고 이에 대한 외부세계의 비판을 의식한 김정은이 지방에도 고급 애육원을 꾸릴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 “북 주민, 국내외서 강제노역 시달려”(9/30,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에 기반을 둔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지난 30일 북한 당국의 의지에 따라 주민이 일생을 통해 겪는 강제노역의 범위와 형태에 관한 보고서(The Will of the State: North Korean Forced Labor)를 발간했다.
  -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 단체의 제임스 버트(James Burt) 정책연구원은 탈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1년여에 걸쳐 조사해 40여 쪽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 버트 연구원은 이처럼 다양한 표본을 조사한 결과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자격이 1990년대부터 변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황해남도 출신 탈북자는 북한 당국은 1985년 이전에는 러시아 극동지역 열악한 환경에 죄수 등 낮은 성분의 노동자를 벌목공으로 파견했다고 증언했음.
  - 그러나 1980년대 후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북한 체제에 우려할 만한 변수로 부각되자 1990년대부터는 사상이 건전하고 국가에 충성심이 높은 자녀를 둔 기혼자를 해외에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버트 연구원은 밝혔음.
  - 버트 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 조사 결과 북한에서는 학생, 어른, 수용소 수감자, 해외 파견 노동자 등 거의 모든 계층의 주민이 국제법에 저촉되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특히 강제노역 문제를 자세히 연구 조사한 것이라고 버트 연구원은 설명했다.
  - 조사위원회는 임의구금, 고문, 처형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의 참혹상을 국제사회에 조목조목 고발했지만, 2천 500만 북한 주민 대부분이 노출되는 강제노역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컸다는 것임.
  - 유럽북한인권협회는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강제노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추가로 포함시킬 것 등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이라는 반 인도적 범죄에 주목하고 개선을 촉구할 것을 권고했음.
- 북한군 탈영병 총격으로 북-중 접경지대 ‘유령 마을’(10/1, 미국의소리)
- 두만강과 3미터 높이의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 지린성 허룽시 난핑진 난핑촌, 지난 1년간 이곳에서 최소한 10명의 주민들이 북한군 탈영병들에게 살해된 뒤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난 이곳은 ‘유령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고 프랑스 AFP 통신이 28일 보도했음.
  - 공식 주민 수는 6천명이지만 대부분의 집들과 건물들은 버려졌고, 창문들은 깨져있으며 잡초만 무성하다는 것임.
  - 지난 몇 달간 노인들도 계속 빠져나갔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 현지 공산당 서기인 우시겐 씨는 AFP에 “모든 주민들에게 밤에는 바깥 출입을 삼가라고 당부한다”며 “살인 사건에 대해 주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는데, 잘 모르면 덜 무서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AFP 통신은 북-중 국경을 따라 이어진 두 개의 길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전했다.

- 하지만 중국 당국이 올해 초 현지 민간인들로 구성된 민병대를 만들어 접경 지역 순찰과 경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민병대는 창설되지 않았다고 함.
- 현지 주민 차이 씨는 중국인들이 탈북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던 것은 과거의 일이라며, “그들은 북한 쪽에 그대로 있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에도 탈영한 북한군이 접경 지역에서 중국인에게 총을 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 일부 언론은 9월 18일 지린성 창바이현 국도에서 국경을 넘은 북한군이 민간인 차량에 총격을 가해 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음.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총격사건이 발생해 중국인 한 명이 부상했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음.

## 2. 북한인권

-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촉구(9/30, 연합뉴스)
  - 미국의 인권단체가 한국 국회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미국의 인권단체인 인권재단(HRF)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 관련 단체 활동과 탈북자를 구출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을 규탄했음.
  - 토르 할보르센 HRF 대표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는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했으며, 유엔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scandal)”이라고 주장했다.
  - 할보르센 대표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 임수경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북한 인권에 아무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음.
  - 그는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이 압박을 받아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밝혔음.

- 이어 “그럼에도 북한 정권이 언젠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만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음.

■ 한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의 밤’ 행사 열어(10/2, 미국의소리)

- 서울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건물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어울리는 북한인권의 밤 행사가 열렸음.
- 이번 행사를 주최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인권개선과 진실규명, 인권피해자료의 수집과 분석, 인권피해 예방과 인권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에 설립돼, 북한인권 분야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이번 북한인권의 밤을 연 것은 이번 자리를 통해 그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미래와 북한 인권의 미래, 나아가 통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임.
- 북한인권센터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13년간 문헌 조사, 중국 현지 조사 등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총 31,634명에 대한 북한인권피해사례 55,866건을 ‘NKDB 통합인권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북한인권의 밤’ 1부에서는 <북한인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김중태 전 하나원 원장의 특강이 열렸고, 이어 2부에서는 남북한 어울림 한마당으로 탈북가수 박리아 씨와, 한국의 성악가 차진주씨의 공연이 펼쳐졌는데, 특히 남과 북의 두 음악가가 함께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참여한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음.

■ 美청년들과 함께하는 北인권문제 홍보동영상·뱅크 제작(10/3, 뉴시스)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음.
- ‘미국 청년들과 함께하는 통일공공외교’라는 제목의 영상은 5분33초 분량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할 6자 회담 국가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만들었음.
- 최근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 청년들과 함께하는 통일공공외교’를 제작한 반크는 조만간 러시아인, 일본인 등 통일 코리야를 위해 가장 중요한 6자 회담 당사국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공외교 영상을 제작한다는 계획임.

- 동영상은 한국의 청년들이 꿈꾸는 통일 코리야는 북한의 가족, 형제, 자매들을 향한 인류애의 실천이고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꿈이며 그 꿈을 미국과 미국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됨.
-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미국인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음.
- 예측하기 힘든 북한을 대상으로 통일이라는 어렵고 힘든 꿈을 과연 한국인들이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 세계인들에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다’며 성취한 것처럼 한국청년들도 해낼 수 있다는 의지를 펼치고 있음.
- 반크는 미국의 초중고 교과서와, 대학교재, 신문 방송, 특히 정책 연구소에서 한국하면 가장 먼저 북한핵문제, 전쟁, 분단문제만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청년들의 열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음.
- 이번에 제작한 통일 공공외교영상은 미국에 어학연수와 배낭여행, 교환학생으로 가거나 인터넷상에서 미국인과 교류하는 한국인들에게 전달하고 곧 영어 버전을 만들어 미국인들에게도 직접 소개되도록 할 계획임.

### 3. 탈북자

- “중당국에 ‘스파이혐의’ 구속 일본인 중 1명 탈북자”(10/2, 연합뉴스)
  - 스파이 혐의로 지난 5월 중국 당국에 구속된 일본인 2명 중 1명은 탈북자라고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음.
  -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중국 당국에 구속된 가나가와(神奈川)현 거주 50대 남성 A씨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로 중국 측에 자신이 일본 정부기관과 관계돼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버지는 재일조선인, 어머니는 일본인인 A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1960년대 재일조선인 귀환사업이 진행됐을 때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1990년대 후반 탈북했음.
  - 이후 2001년 일본으로 돌아온 뒤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 A씨는 지난 5월 단둥시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된 후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일본 정부기관과 관계가 있다고 시인하고 탈북자 지원 단체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A씨는 또 거의 매달 중국에 들어가 북중 접경지대에서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며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음.
- 단둥시는 북중 관계 동향 등을 파악하려는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곧잘 찾는 곳이어서 중국 공안 당국은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해왔음.
- 아울러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 저장(浙江)성에서 체포된 또 다른 일본인은 아이치(愛知)현에 거주지를 둔 50대 남성으로 저장성 동부의 한 군사시설에 들어갔다가 경비병에 의해 체포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인 2명이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힌 뒤 이들을 수개월 구금한 이유에 대해 “중국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확인한 이들 2명 외에도 훗카이도(北海島) 거주 60대 남성이 지난 6월 베이징(北京)에서 체포된 상태라고 전했다.

#### 4. 이산가족

- 미 전문가 “북, 이산가족 상봉 정치화”(9/3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은 지난 29일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극악한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음.
  - 박 대통령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하고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임.
  - 이에 대해 미국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남한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목적의 (우위 확보) 수단으로 이용해왔다고 설명했다.
  -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고, 평화통일을 강조한 부분은 북한에게는 아픈 부분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 내용이 특별히 문제가 됐다기 보다 북한이 남한의 속내를 떠보려는 의도가 크다고 전했다.
  - 미국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도 북한이 항상 인도주의적인 사안과 인권 사안을 정치화해왔다고 비난했음.

-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을 남북 간 대화에서 협상력을 키우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이 만약 이산상봉이 이뤄지기 전에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불행히도 이산상봉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단언했음.
- 남북, 8일 이산가족 상봉 100명 최종 명단 교환(10/4, 연합뉴스)
    - 남북이 오는 8일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음.
    - 상봉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지난달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이 오는 8일 판문점에서 상봉 대상자 100명의 명단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4일 밝혔음.
    - 명단에는 이산가족과 부모·형제자매·친인척의 이름, 고향, 주소 등이 담김.
    - 앞서 한적은 지난달 16일 북측이 의뢰한 이산가족 명단 200명의 생사확인 작업에 들어가 4일까지 확인을 마무리했음.
    - 또 지난달에 북측에 의뢰한 남측 이산가족 250명의 북측 가족 생사 확인 결과는 5일에 받음.
    - 한적은 이 결과를 토대로 상봉 의사 등을 점검한 뒤 7일까지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확정함.
    - 선정된 남측 이산가족들은 상봉 하루 전날 강원도 속초 숙소에 집결해 통일부 주관 방북교육을 받고 이튿날 금강산의 만남 장소로 가게 됨.
    - 이처럼 한적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달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바 있음.
    -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북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됨.

##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 7. 대북지원

- 덴마크 NGO, 북 고아에 놀이터 지원(9/30, 자유아시아방송)
  - 영양실조 상태인 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량 지원을 해온 덴마크의 구호단체인 미션 이스트(Mission East)가 놀이터 증축이나 상하수도 시설 개선으로 지원 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 미션 이스트가 최근 공개한 2014 연례보고서를 보면, 농촌 지역의 식량 상황을 개선하고 식수 및 생활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지원 영역을 넓히고 있음.
  - 지난해 미션 이스트의 주요 대북 활동은 애육원 지원, 자연재해복구 그리고 농촌지역 환경지원 등 세 분야에 집중됐음.
  - 보고서는 북한에서 영양 상태가 가장 나쁜 인구 집단이 애육원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면서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황해남도와 강원도 지역 애육원들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황해남도 해주에 있는 애육원(고아원)에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새 놀이터를 지었으며 750명의 애육원 원아들에게 장난감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 미션 이스트는 북한의 애육원에 있는 어린이에게 콩단백질과 아미노산, 미네랄과 비타민이 첨가된 가루형태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해왔음.
  - 이 단체의 대변인은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북한의 소외계층에게도 식량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이 단체가 지원하는 영양강화식품은 쌀과 옥수수 중심의 식사습관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 단백질 등의 필수 영양분이 부족한 북한 어린이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션 이스트 측은 설명했다.
  - 자연재해 복구지원과 관련해서 2012년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유럽의 인도주의 지원단체인 '티어 네덜란드'를 비롯한 기부자들의 도움으로 지난해까지 홍수로 집을 잃은 511가구에 새로운 집을 지어주었으며 지난해와 올해도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복구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수질오염으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막기 위한 물 정화사업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진행 중임.
  - 지난해부터 식량안보와 식수확보와 생활폐수 처리를 위한 시범 사업을 강원도 동부 지역에서 시작했으며 약 3천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농사 짓는데 필요한 물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미션 이스트는 현재 북한의 132개 기관에 있는 2만 명의 어린이들과 1천500명의 산모들에게 영양 보조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북한에 대표단을 보내서 식량 상황과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지원 상황을 점검해왔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국 NGO, 황해남도 병원에 수도시설 설치(9/30, 미국의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황해남도 해주시 '제3결핵 예방 병원'과 배천군 '제3결핵 요양원'의 수도시설 공사를 마쳤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29일 'VOA'에 관계자 8명이 지난 8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17일 동안 북한을 방문해 수도를 설치하고 낡은 시설을 개보수 했다고 이같이 밝혔음.
  - 이를 통해 해주시 병원 부지에 16개의 급수전이 설치됐고, 배천 요양원 인근에 11개가 설치됐음.
  - 열악한 현지 전력 사정을 고려해 두 곳 모두 태양열로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임.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아울러 이곳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해 주고 재충전이 가능한 조명 시설 16개를 지원했음.
  - 이 단체는 이번 방북 기간 중 결핵 병원 12곳의 시설을 점검하고 개보수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황해남도 제3결핵 예방 병원 수술실에 있는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중앙 제3 결핵 예방 병원 수도 시설도 수리했음.
  - 또 황주 제3결핵 요양원에 새로 건설된 다체내성 결핵 환자 병동에 수도관과 급수전도 설치했음.
  - 한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에서 머물 당시 북한군 병력과 장비 이동 등 경계 태세가 강화된 모습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공사를 끝내기 위해 분주한 모습 등도 볼 수 있었다고 밝혔음.

## 8. 북한동향

- 【「조평통」 대변인 담화(9.29)】 '차대통령,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관련 '동족대결 망발·악담질·얼빠진 소리' 등의 표현 속에 '이산가족 상봉도 실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며 '남 당국은 운명적인 시각에 도발적 언행들이 예측할 수 없는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민족 앞에 사과할 것'을 주장(9.29, 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